



#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방안


2014년 11월

과 정 : 제11기 핵심리더과정

소 속 : 무 주 군

교 변 : 57번

성 명 : 이 해 심





목 차

I. 서론 .....	387
II. 본론 .....	388
1.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현황 .....	388
1)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2)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 동태	
3) 인구고령화 현황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	392
1) 가족기능의 강화	
2) 가족관계의 변화와 노인가족의 증가	
3) 세대간 갈등심화	
4) 생산 인구의 감소 및 신규 노동력의 공급 감소	
5) 사회보장비의 증가	
3. 저출산의 원인 .....	395
1) 가치관의 변화	
2) 사회경제적 요인	
3) 정책적 환경 요인	
4. 선진국의 출산장려제도 .....	406
1) 스웨덴   2) 프랑스   3) 독일   4) 일본	
5. 전북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제도 .....	409
6. 타 시·도 출산장려제도 .....	412
7. 저출산 대책 .....	415

- 1) 노동시장의 안정화
- 2) 영유아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
- 3) 출산지원 강화
- 4) 육아휴직제도 강화
- 5)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6)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 7)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강화
- 8) 성평등 가치관의 확산

Ⅲ. 결 론 .....	419
--------------	-----

참고문헌 .....	420
------------	-----

## I. 서 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 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국가적 위기로 거론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출산율은 인구구조와 직결되는 문제로 그 파급효과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 2.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2005년에는 세계최저수준인 1.08명에 이르렀다. 그 이후 범국가적 정부대책 추진으로 더 이상의 악화는 막을 수 있었으나 작년도(2013년)에, 1.19명으로 여전히 심각한 저출산 상태에 놓여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천만명 고점을 찍은 뒤에 계속 줄기 시작해서 2100년에는 3천700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세계 인구는 2012년 70억 명을 넘어선 뒤 계속 늘어서 2100년에는 10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9%에서 0.37%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인구가 곧 국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의 현황과 문제점, 원인, 외국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저출산의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현황

#### 1)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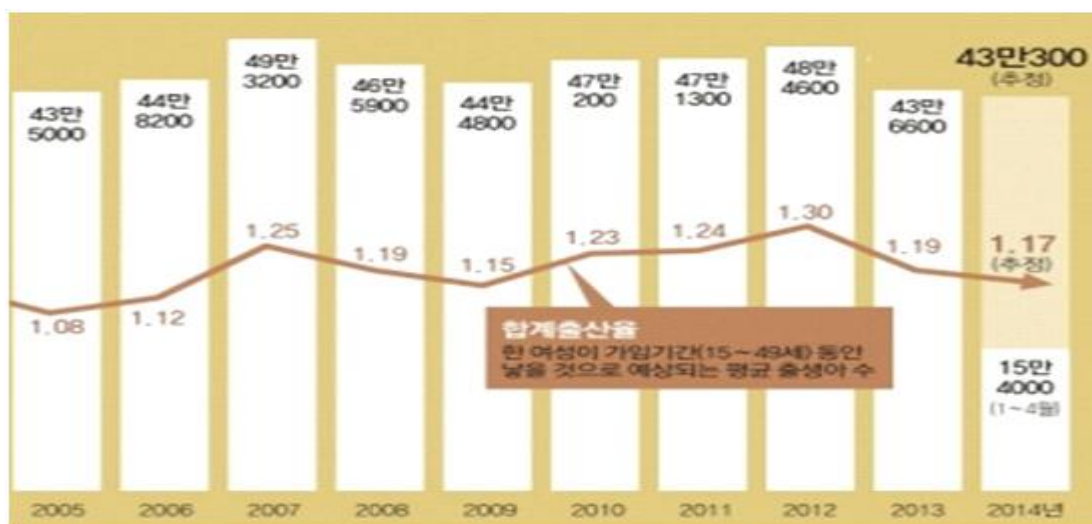
2014년 1~4월 출생아 작년보다 2100명 감소  
올해 출산율 1.17명  
12년째 OECD 꼴찌

올해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1.19명)보다 더 떨어져 올해도 초저 출산국(출산율 1.30명 이하)을 탈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출생아수는 15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만6100명)에 비해 약 2100명 2012년(16만8900명)보다는 1만 49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가 연말까지 유지되면 지난해 보다 출생아수가 총 6,000명 이상 감소해 올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보다 0.02명 떨어진 1.17명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라는 오명을 12년 째 씻지 못할 것이 유력하다.

한국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명) 자료 : 보건복지부

2014년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동아일보가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과 함께 시뮬레이션 한 결과



OECD주요국가 합계 출산율 (2010년 기준, 단위:명) 자료:OECD



주요국 저출산 예산과 출산율



우리나라의 시기별 출산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82년 ~ 1985년까지 출생아수가 급감 했고, 특히 198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9.4% 감소, 이어서 1984년에는 12.4% 감소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1987년까지 이어지다가 1988년~1992년 사이에 다시 2~5% 범위로 계속 감소하고 2000년에

잠시 3.3% 증가 추세를 보인 이후 2001년에는 12.5% 2002년에는 11.2%씩 계속해서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 이러한 경향은 합계출산율에서도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서 1960년에는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지만 1990년 1.59명까지 떨어지게 되고 그 후 2009년까지 하락하다 2009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었으나 2013년부터 다시 하락하고 있다.

## 2)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 동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월간 출생아 숫자가 늘어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베이비붐 세대자녀인 30세 안팎 여성들의 출산이 늘어나고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된 영향일 뿐 추세적으로 보긴 어렵다.

출생아수 증가 배경은 크게 2가지로 지적된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 자녀인 ‘베이비붐 에코세대’(1979-83년 출생) 연령층이 결혼해 아이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연령별 인구는 70만(1983년생)~80만(1981년생)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출산을 미뤘던 커플들이 뒤늦게 아이를 낳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연도별 출생아수는 2009년 44만 4800명에서 2012년 48만 4천 명으로 8.8%늘었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13년 출생아는 43만 6600명으로 2012년보다 4만 8000명(9.9%)감소했다. 2010~2011년 증가세를 보인 출생아수가 다시 줄어든 것이다. 특히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조(組)출생들이 2013년 8.6명으로 2012년 보다 1.0명 감소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의 경우 2013년 1.19명으로 2012년보다 0.11명 줄었다. 2013년 출생아는 43만 6600명으로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래 4만 5000명이었던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합계출산율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이다.

반면 산모평균 출산연령은 고령화되는 추세로 매년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첫째아 출산모의 평균연령은 30.73세로 2012년(30.50세)보다 0.23세 상승했다. 둘째·셋째아 출산모의 연령도 32.62세, 34.36세로 각각 2012년보다 0.22세 0.19세 올랐다. 이에 따라 35세 고령산모 구성비는 2012년 18.7%보다 1.5% 포인트 오른 20.2%로 역대 가장 높았다.

그리고 29~33세의 주 출산인구가 감소했고, 초혼 연령이 증가하면서 둘째아를 낳는 비중도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미혼자 역시 증가하고 있고, 2012년 흑룡의 해에 출산을 많이 하다 보니 기저효과로 2013년 출생이 영향을 받았다.

### 3) 인구고령화 현황

2016년에 이르면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서 향후 2018년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14.3%, 2026년에는 20.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고령화는 미국 프랑스 등 기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 돼 고령인구비율이 14%에서 20%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8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노년부양비는 15.0이며 이는 생산 가능 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을 2030년에는 3명이 1명을 부양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노령화지수는 67.7로 유소년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68명으로 2016년에 이르면 노령화 지수가 100.7로 노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0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가구'의 비중은 17.4%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의 경우 2010년 총가구구성비의 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 1) 가족기능의 약화

사회의 변화와 변동은 가치관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던 우리의 가족 구조도 이제는 뚜렷한 핵가족화 경향을 띠고 있으며, 가족이나 부모에 대한 우선순위도 변화하고 있다. 한국가족의 모습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가족구조 면에서 부부와 미혼자녀 중심의 핵가족이 늘고 있으며 확대가족이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고 자녀가 없는 부부만의 가족의 증가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적은 수의 자녀를 두거나 자녀를 두지 않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구원 수가 줄어들고 이에 가족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자녀를 많이 두면서 부모를 부양하는데 자녀 한 명이 안게 되는 부담이 적었으나 오늘날에는 소득의 문제인 경제력 부양의 문제,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가족의 보호기능이 약화되는 데에 따른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2) 가족관계의 변화와 노인가족의 증가

가족 및 친족관계의 변동을 보면, 가족관계의 중심축이 종래의 확대가족간의 관계로부터 부부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자녀수의 감소로 친족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합계출산율이 1.19명 내외로 낮아진 출산수준에서 한 자녀를 둔 가족의 수가 증가 하고 있다.

모든 부부가 아들과 딸 중 한 자녀를 두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결혼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여 똑 같은 수의 자녀를 두거나, 자녀를 두지 않을 경우 그 자녀들에게는 사촌과 형제자매가 없는 친족관계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부부가 결혼하여 한 자녀씩만 낳을 경우, 그 자녀는 친조부모, 외조부모, 그리고 부모 등 6명의 보호자를 거느리는 기형의 가족관계 내지 친족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자녀 수의 감소와 더불어 인구이동으로 인한 가족분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노인부부만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1970년 이후 핵가족 구성비의 증가는 대부분 1세대 핵가족 즉, 부부만이 사는 가족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1세대 핵가족의 증가는 농촌에서 더욱 뚜렷하다. 노인 1인 가구와 노인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1세대 핵가족은 앞으로 해체과정을 밟게 되며, 젊은 세대의 가족은 도시로 진출함에 따라 농촌에서의 가족 수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급격하게 줄어드는 출산율을 비추어 볼 때 비단 농촌만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웃과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도시문화속 독거노인들 중 홀로 주검으로 발견되는 등 이미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 3) 세대간 갈등심화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이 첨예화 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피부양 노인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생산가능 인구의 노년 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002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20년에는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2040년에는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됨으로써 부담이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근로자의 감소 및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현상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저성장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득의 분배 및 재분배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2000년 우리나라의 노령관련 연금지출 비중은 GDP의 2.1%수준으로 OECD 평균 7.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나, 2050년경에는 GDP의 10.1% 수준으로 상승하여 OECD 평균 10.8%와 비슷한 수준이 되고 그 증가폭은 OECD 평균 증가폭의 두 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제도 등 노후 소득 보장제도에 있어 부담의 형평성, 급여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후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장기 재정이 불안하여 지속 가능한 제도로서의 존립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 4) 생산 인구의 감소 및 신규 노동력의 공급 감소

최근 출산저하의 문제로 많은 사회제반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것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생산인력의 감소와 신규노동력의 감소를 들 수 있다. 그 중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연령인구의 비율과 수를 감소시켜 생산공급의 감소를 초래하고, 생산 공급의 감소를 상쇄할만한 생산성 증가가 없는 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에서는 청장년기의 저축 성향이 노년기의 저축성향보다 높으므로 고령화에 따라 총 저축이 감소되면, 가용자금 감소와 투자위축 등 경제성장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연령에 따른 자산 보유 성향 차이로 고령화 사회에는 자본시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노동력의 공급은 필요에 따라 쉽게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규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까지는 성장과 훈련기간이 소요되므로 무엇보다 장기간에 걸친 대응책이 필요하다. 15~24세 연령계층은 생산연령계층이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생산연령의 전기 단계라고 한다면, 25~34세는 가장 왕성한 노동력 공급원이 되고 35세 이후의 연령계층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차 낮아지는 계층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의 낮은 출산수준에서 태어난 유소년 인구가 생산연령 인구에 유입되는 2000년부터 증가추세가 급속히 둔화되어 2020년경부터 생산연령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며 그 후, 연평균 0.7~0.8%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이후에는 노동력의 절대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노동력 공급의 시차를 감안할 때 노동력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노동력 공급문제가 심화된 상태이며 이 문제는 새로운 노동력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시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장래 노동력부족에 대한 추정과 적기에 필요한 인력공급을 위한 대책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5) 사회보장비의 증가

인구노령화에 탄력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우리 사회가 깊어져야 할 사회적 비용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사회전반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써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몇 십 년간 대다수 선진사회에서 은퇴연령이 낮아지고 연금생활자의 비중이 증가해오면서, 노년계층의 높은 복지의존도는 커다란 사회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개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평균수명의 연장 등을 고려해 볼 때 30년 이상의 기간을 연금이나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로 충당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로 인하여 선진국들도 과거 순수한 형태의 복지제도로부터 고령의 취업 장려를 통한 노년기 복지의 실현으로 정책적 지향점을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저하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를 감안하면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는 당연한 사실이다. 특히 저출산의 지속화는 생산연령층의 노인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저출산의 원인

현대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복잡적이다. 여기서는 이들을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으로 크게 세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1) 가치관의 변화

#### ①결혼관의 변화

한국은 과거 유교적 전통의 영향이 강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당연한 삶의 과정이며 중요한 의무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보편적 결혼관이 약화되고 그 영향으로 충분한 미혼기간을 보낸 후 결혼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가치가 되어버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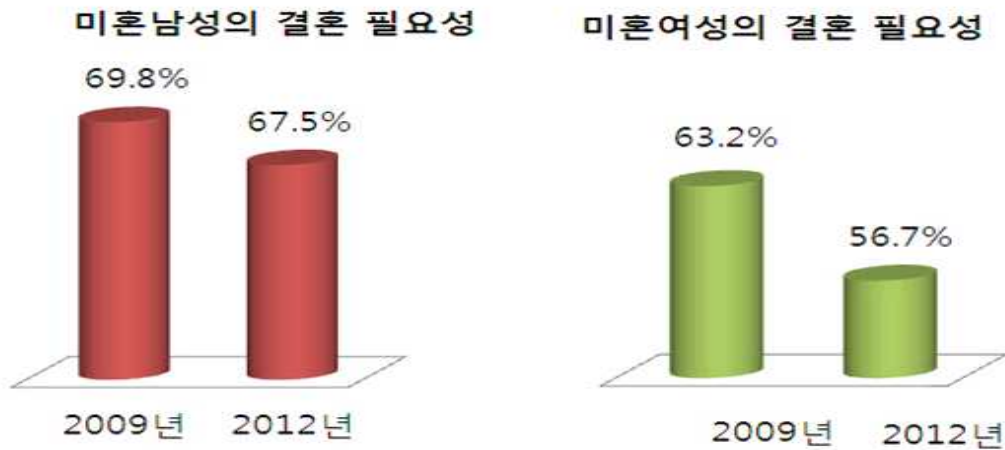
여성경제 활동과 결혼 상관성을 연구한 오픈하이머는 맞벌이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가족 내 성별분화에 따른 노동이 더 이상 현재의 결혼생활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결혼의 안정성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육 경제활동 참가 기회가 높은 집단일수록 결혼으로 인한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가진 배우자를 원하고 이것이 만혼으로 연결되어 저출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실제 한국에서 초혼 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더불어 혼자 살기를 원하는 독신자의 증가로 미혼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더불어 혼자 살기를 원하는 독신자의 증가로 미혼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과 가족의 형성에 따른 선택의 범위와 유보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넓어져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만혼화 현상을 빚어낸다고 볼 수 있다.

결혼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퇴색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결혼을 통해 출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한국사회에서 출산을 회복의 위해 요인이 되고 있다. 2013년도에 보건복지국에서 조사한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의하면 결혼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09년에 비해 미혼남성(69.8%→67.5%)과 미혼여성(63.2%→56.7%)모두 감소하였다.

미혼남성(67.5%)은 미혼여성(56.7%)에 비하여 10.8%PT 차이에서 ‘결혼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미혼남성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 (25.8%)이 미혼여성(13.3%)의 두 배에 달하였다.

구 분	미혼남성		미혼여성	
	2009년	2012년	2009년	2012년
반드시 해야 함	23.4%	25.8%	16.9%	13.3%
하는 편이 좋음	46.4%	41.7%	46.3%	43.4%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	25.1%	26.5%	31.8%	37.2%
하지 않는 편이 좋음	2.4%	3.4%	2.8	4.4%
모르겠음	2.8%	2.6%	2.2%	1.7%
계	100.0	100.0	100.0	100.0

## 미혼남녀의 혼인 가치관



### ① 자녀관의 변화

한국경제·오픈서베이, 남녀 대학생 1600명 설문 (2014.6)

"결혼 후 남편이 원해도 아이 안 낳을 것"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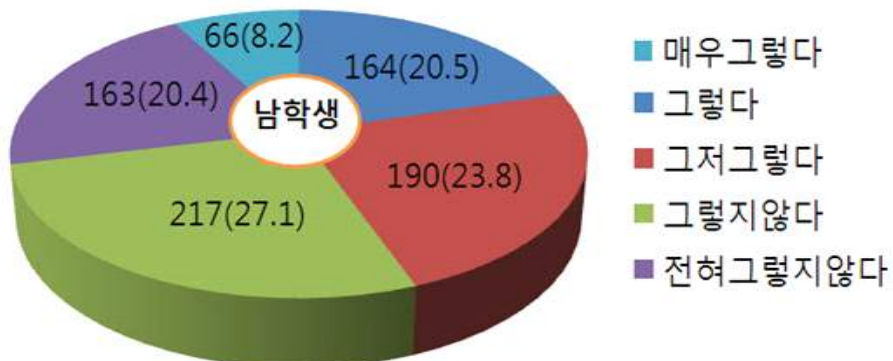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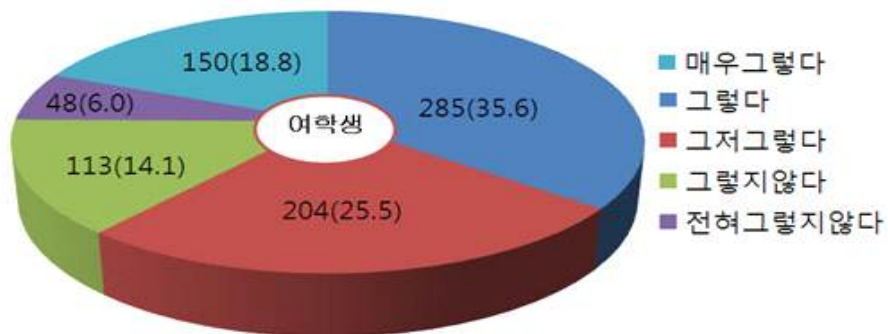
한국 여자 대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으며 취업과 직장생활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면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여학생도 3분의 1에 그쳤다.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 힘들고 경쟁적인 한국사회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모바일 리서치 업체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남녀 대학생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처럼 저출산·고령사회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결혼할 생각은 있지만 .....

결혼에 대해 대학생들이 바라는 것과 현실의 간극은 컸다. 결혼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여학생의 87.9%, 남자 대학생의 94%가 있다고 답했지만 결혼보다는 취업과 대학생활이 우선이라는 답변(여성 17%, 남성 28.4%) 보다 훨씬 많았다. 단, 여학생 응답자 8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35명(54.4%)은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인 161명에 불과했다.

점점 혼인 연령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남녀대학생 모두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남학생의 경우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47.1% ‘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답이 44.5%로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여학생은 경제적 부담을 꼽는 응답이 42.4%로 가장 많았지만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 때문’이라는 응답도 37.4%에 달해 남학생과 차이를 보였다.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여학생 (전체의12.1%)을 대상으로 결혼을 꺼리는 이유를 물어 봤더니 69.1%가 결혼에 따른 의무와 역할부담을 지적했다.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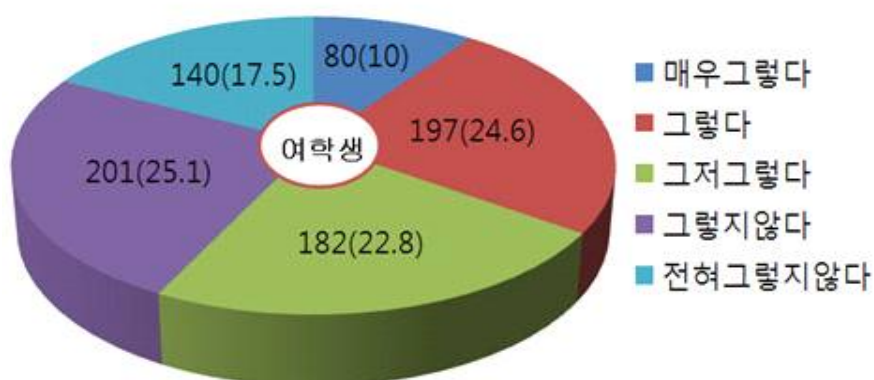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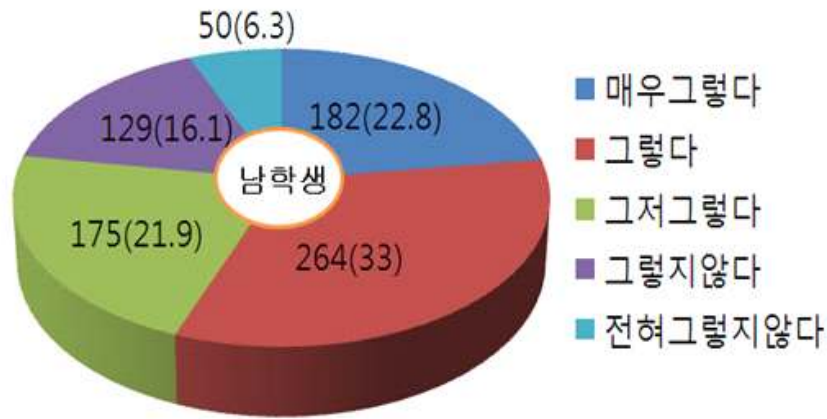
남녀 모두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자신이 없다면 낳지 말아야 한다’는 설문에 과반수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여학생의 경우 매우그렇다(41.1%)와 그렇다(35.4%)를 합쳐 76.8%를 차지했고 남학생도 57.5%(매우그렇다29.5%, 그렇다28%)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또 ‘자녀가 가족의 유대를 강하게 한다’ (여성85.5%, 남성87.6%), ‘자녀가 있어야 노후에 외롭지 않다’ (여성68.5%, 남성76,2%)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설문에 여학생의 87.1%가 남학생은 73.6%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경쟁적인 한국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학생의 77.6%, 남학생의 61.7%였다. 자녀에게 워메이닝을 싫어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답변도 많았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여학생 응답자의 32.4%는 ‘아이에 워메이닝을 싫어서’라고 답했고 남학생의 경우 이 응답비율이 42.9%에 달했다.

김태현 한국교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1990~2000년대만 해도 소득이 더 높아지면 아이를 더 낳겠다고 답하는 젊은이가 많았지만 요즘은 여건이 나아져도 더 낳진 않겠다고 답하는 젊은이가 많다”고 설명했다.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위 : 명, %)





배우자가 원해도 낳지 않는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인식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방해 받는 것을 가장 꺼렸고, 남성은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여성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이 20.1%에 불과 했지만 남성은 47.5%로 절반에 육박했다.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하는가’는 설문에도 남성은 그렇다(55.8%)는 답변이 그렇지 않다(22.4%)의 두 배를 넘었지만, 여성은 그렇다(34.6%)는 답변이 그렇지 않다(42.6%)는 의견보다 훨씬 적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남편이 바란다면 더 낳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여학생의 절반이 넘는 51%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게 삶에 지장을 준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여학생의 49%는 ‘그렇다’고 했지만 남학생은 이 비율이 22.9%에 그쳤다. 조영태 서울 보건대학원 교수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양육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나 부담이 줄지 않으면서 생기는 현상”이라며 이 같은 인식의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 사회경제적 요인

### ① 불안정한 경제상황

신자유주의는 우리시대의 정치경제를 정의해주는 패러다임으로 상대적으로 소수인 이익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사회를 지배하도록 허용한 정책과 조치를 가리킨다. 이것은 단순히 말하면 자본과 정보를 독점한 20% 부유층과 그들에게 예속되어 불안정한 고용과 경제적인 저임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80%의 빈곤층으로 나누어지는 양극화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도산과 대량실업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었고 갑작스런 경제활동의 환경변화는 생존에 대한 격심한 공포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했다. 한국시장이 외국에 전면 개방되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중장년층의 명예퇴직이 증가하여 평생직장과 정년퇴직의 개념이 약화되었고 수많은 가게가 빈곤에 허덕였으며 청년실업 역시 급속히 증가하여 직업의 불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

결혼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이다. 청년층의 실업률과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아질수록 치열해진 취업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투자가 늘어나고 이는 교육기간의 증가로 이어진다. 해외 어학연수, 실무교육 등 추가교육 소요 연한은 다른 사회적으로와 맞물려 초혼연령을 상승시키고 25~29세 청년층의 미혼율을 증가시킨다.

## ② 자녀양육 및 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가계는 자녀양육, 건강유지활동, 소비문화활동 등 다양한 가정재를 생산한다. 자녀라는 가정재를 고려해볼 때 가계는 자녀라는 가정재의 소비와 여타 상품의 소비에서 효용을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가계효용함수는 소득의 크기에 의해 제한되며 자녀라는 가정재의 가격에는 의식주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포함하는 직접 비용 및 부모들의 기회비용이 포함된다. 자녀양육 비용이나 육아 인프라 부족 등 현실적 부담과 보육비용의 부모부담 및 높은 사교육비등 자녀 양육 및 교육의 고비용 구조지속은 출산을 연기 또는 중단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사교육비 부담은 소득에 상관없이 전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비 및 교육비 증가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

□ 부모의 양육 책임한계

- 부모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기혼부부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에 대한 견해 (단위 : %)

구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혼인할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기타	생각해 보지않음 /모르겠음
2006	8.6	46.3	11.9	27.0	5.5	0.1	0.5
2009	9.6	49.6	12.2	23.1	5.0	0.1	0.4
2012	8.9	49.6	15.7	20.4	4.6	0.0	0.8

- 부모가 부담하는 자녀의 월평균 양육비는 2003년 74만 8천원 => 2006년 91만 2천원 => 2009년 100만 9천원 => 2012년 118만 9천원으로 지속 증가하였다.

자녀1인당 월평균 양육비

(단위 : 만원)

구분	가족공동비용 중 개인자녀 몫	자녀개인비용	계
2003	29.4	45.4	74.8
2006	35.6	55.6	91.2
2009	41.0	59.9	100.9
2012	50.2	68.7	118.9



- ▶ 양육비 공통비용은 월평균 50만 2천원으로 2003년 19만 4천원보다 1.7배 증가하였다. 특히 교통통신비가 12만 7천원을 차지하였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공통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분석 아 동수	주거 및 광열 수도비	가구 집기 가사 용품비	교양 오락 비	교통통신 비	기타소비 비소비지출	계
2003	14,221	4.8	0.9	1.7	8.2	13.8	29.4
2006	11,816	5.6	1.1	2.6	10.6	15.7	35.6
2009	11,496	5.5	1.3	2.6	11.2	20.4	41.0
2012	10,515	7.4	1.8	3.2	12.7	25.1	50.2

- ▶ 양육비 개인비용은 월평균 68만7천원이며, 2003년 45만4천원보다 1.5배 증가하였다. 양육비 개인비용 중 사교육비가 가장 큰 22만 8천원 식료품비가 20만 4천원이었다.

자녀1인당 월평균 양육비: 개인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분석 아동수	식료품비	의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계
2003	14,221	12.7	3.7	1.7	12.1	15.2	45.4
2006	11,816	15.4	4.8	2.1	13.1	20.3	55.6
2009	11,496	15.6	4.4	1.6	15.3	23.0	59.9
2012	10,482	20.4	6.8	2.2	16.5	22.8	68.7

- 출생~대학 졸업까지의 자녀 1인당 총 양육비는 3억896만4천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재수, 휴학, 어학연수 등이 제외된 것이다.

자녀 1인당 전체 양육비용

자녀의 연령	양육비용	비고
영아기(0~2세)	3,063.6만원	3년간총비용
유아기(3~5세)	3,686.4만원	3년간총비용
초등학교(6~11세)	7,596만원	6년간총비용
중학교(12~14)	4,122만원	3년간총비용
고등학교(15~17세)	4,719.6만원	3년간총비용
대학교(18~21세)	7,708.8만원	4년간총비용
전체(출생 후 대학 졸업시까지)	3억 896만 4천원	22년간총비용

### ③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는데 과거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적었던 것은 가부장제도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자본주의 사회는 여성을 가정의 굴레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남성들에 의한 힘든 육체 노동력이 필요한 사업은 점차 그 위력을 잃어가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여성 노동력이 증가하고 있다.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민주적 가족관계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여성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이상 사회는 더 이상 남성만의 것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여성과 경쟁에서 수세에 몰리고 실질적 위기를 맞게 되어 점차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를 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가정과 일을 양립문제이다. 과거 전통사회에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만이 여성의 고유역할이었으나, 지금은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은 과거보다 출산 및 육아에 전념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④ 출산, 육아, 가사의 부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업화의 발달로 환경 문제가 심각하여 여성의 출산 건강 수준을 저하시킨다. 또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시설 등의 법제도적 지원의 불충분이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급상승하다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는 다시 낮아졌다가 30대 후반부터 증가하여 40대 초반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M자형 그래프를 취하고 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한국여성들은 2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출산 및 육아와 경제활동 중 양자 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일부는 전자를 선택하고 일부는 후자를 선택하게 된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택할 경우 출산율을 떨어뜨리는데 기여한다. 그런데 여성이 자아실현욕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전자보다 후자를 선택하여 출산율 감소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 3) 정책적 환경 요인

정책적 요인은 앞서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 경제적 요인과는 달리 보편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시기에 정부가 집행한 정책이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력을 말한다. 한국의 출산억제정책인 가족계획사업이 대표적인 정책적 요인이다.

한국의 경우 1960년 당시 높은 인구증가율은 경제 개발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

각하여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시행하였다. 출산조절의 인위적 통제수단인 피임법을 보급시키기 위한 각종 계몽과 교육 및 각종 서비스 등의 다각적인 노력과 더불어 사회제도적으로 출산 수준을 낮추기 위한 유도정책을 병행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단체가 협력한 가족계획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60년에서 1965년까지의 준비과정을 거쳐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하에 1966년에서 1981년까지 15년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실효를 거두게 되어 한국의 인구 억제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은 강력한 인구 억제정책으로 출산율이 2002년 이후 인구 대체 이하로 하락하게 되었으며 2005년에는 합계 출산율 1.08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하였다.

#### 4. 선진국의 출산장려제도

출산휴가 늘리고 근로시간 줄여 ‘저출산 극복’  
스웨덴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의무화  
프랑스 자녀양육 필요 시점마다 가족휴당 지급  
독일 교육적 측면 강조 보육서비스 제공 눈길  
일본 출산보조금 일괄지급 병원비 전액무료

##### 1) 스웨덴

스웨덴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해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출산정책을 펴오고 있다.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길고 충분하다. 출산과 양육은 남녀 모두의 일이라는 관점에 따라 아빠가 집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1946년부터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아동수당제도는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부모에게 매월 지급된다. 아동이 1명인 경우에는 매월 15만원 정도 받게 되며 아동수가 많을수록 지원받는 추가수당이 늘어난다.



또 부모는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60일간의 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아동간병휴가를 받은 부모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아동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부모 또는 이웃이 간병할 경우에도 1일 2만~3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된다.

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부모는 480일의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 부모가 공동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한편이 반드시 60일 이상 사용하고 다른 한편은 420일 이하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부가 아동보육에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출산휴가를 받은 부모는 390일까지는 월 평균소득의 80%에 해당되는 출산급여를, 나머지 90일은 1일 2~3만원 정도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하루를 완전히 쉬는 '전일 휴직형'과 반일 혹은 2시간의 육아휴직을 의미하는 '근로시간 단축형'으로 나눠 육아휴직제도가 운영된다. 전일 휴직형은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사용 가능하다. 유급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이며 휴직자는 월평균 소득의 80%를 받는다.

## 2) 프랑스

저출산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한 국가다. 출산 증가를 위해 새로운 가족정책을 채택했고, 이후 다른 유럽국들과 달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16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하인 경우는 113.15유로(약 15만6000원), 3자녀는 258.1유로(약 35만6000원), 4자녀는 403.09유로(약 55만6천원)등 모든 가정에 매달 지급한다. 2명 이상의 부양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가족의 상황과 수입액에 제한 받지 않고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 지급된다. 가족수당은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출산, 보육, 취학 등 자녀양육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점에 맞춰 지급된다. 입양한 부모 프랑스에 거주하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도 혜택을 준다.

특히 출생, 입양 특별 수당으로는 임신 7개월까지 979유로(약 135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다태임신 (둘 이상의 태아를 동시에 임신한 상태)일 경우 태어날 아이수에 이 액수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태어나서 3살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매달 약 160유로(약 22만원)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여성에게는 3년 동안 매달 340유로(약 46만8천원)를 사회보장기금에서 지급한다.

프랑스의 보육서비스는 특수계층 보다는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다는 게 원칙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 보육시설의 대부분 공립이며 유치원이 무상교육이므로 거의 모든 3~5세의 아동이 공교육과 공교육시설을 이용한다. 하지만 13%는 공인가정위탁소에서 돌본다. 육아휴직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매달 512유로(약 64만원)를 보조 받는다. 아동의 질병, 사고, 장애의 경우에는 1년간 연장도 가능하다. 고용이 보장되며 휴직사용자는 동일한 직위 혹은 동일한 임금 수준의 유사한 직종으로 복귀된다.

자녀가 2명 이상 이거나 다태임신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은 늘어난다. 첫아이와 둘째에 대해서는 출산 이전 6주와 출산 이후 10주 동안 소득의 84%에 해당하는 급여와 산후수당이 제공된다. 셋째 이후에는 출산 이전 12주, 출산 이후 22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3) 독일

아동의 부양 및 양육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독일은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취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경우에는 자녀 양육기간과 자녀의 수에 비례해 노후 연금을 지급하는 주부연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1954년부터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오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25유로(약 17만2천원)를 셋째 자녀에게는 150유로(약 20만6천원) 넷째 이상은 175유로(약 24만1천원)를 지급한다. 부모가 실업자인 경우에는 자녀연령이 21세 미만일 때 까지 지원한다. 부모가 학생이나 직업훈련생인 경우 27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또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 유아원, 방과 후 보육시설 등을 오전·오후·종일반 형태로 운영하며 보육서비스는 부모가 16~20% 부담,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또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의 모성 보호기간을 이용할 수 있

다. 조산이나 쌍둥이를 출산한 여성은 14주 동안 고용주가 세금을 제외한 실질적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임신 중 여성에게 야간, 휴일 근무를 시킬 수 없다. 1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는 부, 모 동시에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 4) 일본

출산시 출산보조금으로 일시에 42만엔(한화 418만원)을 준다. 이는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출산보조금은 조금씩 다르지만 출산비용전액 또는 일괄 25만엔, 또는 최고 42만엔까지 다양하다 출산시 병원을 이용 하는 것은 무료다. 선천성 미숙아를 출산하면 의료비 전액이 무료다.

임신 전 휴가는 보통 8주이며, 기존의 모성휴직에 출산 후 최대 1년 6개월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한다. 산후휴가와 별도로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50%를 보전한다. 교육비로 6년 동안 36만엔(약358만원) 더움 6년간 183만엔(약 1,82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수당지급 대상은 종전 두 자녀 이상에서 한 자녀까지 확대했다. 자녀 양육을 지역사회가 지원하고 자녀이익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관점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근로시간 단축제, 탄력적 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시간외근로의 금지, 사업체 내에서 육아서비스 제공 및 보육시설 운영 등 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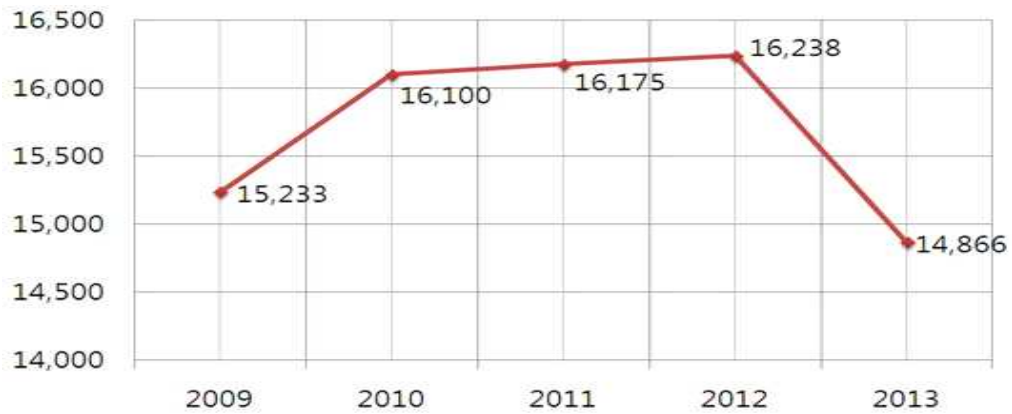
#### 5. 전북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제도

##### ● 전북지역 출생아수 급격감소

전북지역 출생아수는 지난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신생아 출산현황은 지난 2009년 1만5233명에서 2010년 1만 6100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2011년(1만6175)과 2012년(1만6238명)에 들어서면서 증가세가 주춤하다가 지난해에는 1만 4866명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 가족 및 향후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 하는 등 각종 장려책을 내놓고 있다.

전북지역 연도별 출생아수(단위: 명)



- 자치단체의 출산장려책은 크게 출산장려금과 자녀 양육비로 구분된다. 출산장려금은 자치단체별 차이가 있지만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읍은 넷째 이상, 장수는 다섯째 이상, 김제는 일곱째 이상 1,000만원이 지원된다. 반면,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많지 않다. 무주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순창은 월 5만원씩 분할 지급한다. 정읍은 셋째 아이에 대해서만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한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방안 대부분이 출산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문제, 자녀 양육 부담 등이 꼽히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이 요구된다.

시, 군	출산장려제도
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셋째아 이상 출산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한다. 자녀양육비는 월 10만원씩 12차례에 걸쳐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전주시예 1개월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이다.</li> </ul>
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장려금 지원 및 장애인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출산장려금은 1년 이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이 지원 대상이며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2회 분할)이다.</li> <li>•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150만원에서 최소 70만원이다. 대상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이다.</li> </ul>

시, 군	출산장려제도
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익산시 관내 주민등록 1년 이상 둘째 이상 출생한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둘째야 30만원, 셋째 8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이다.</li> </ul>
정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장려금과 다자녀 학자금, 출생아 의료비, 다문화가정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출산한 둘째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이며 둘째 100만원(5회 분할), 셋째 300만원(10회 분할), 넷째이상 10,000만원(20회분할)이다. 또 셋째 아이에 대해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하며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출산한 셋째 이상 자녀 중 셋째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li> </ul>
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며,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가정간호서비스를 한다. 출산지원금은 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대상이며, 첫째는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400만원이다. 산후조리지원금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셋째 이상의 산모(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가 대상이며, 셋째 이상부터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가정간호사 서비스를 희망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월 2차례에 걸쳐 치료적 간호, 기본적인 간호,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한다.</li> </ul>
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장려금 지원 및 장애인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준다.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대상이며 둘째는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 여섯째 800만원, 일곱째 이상 1,000만원이다.(넷째 이상은 10개월 분할 지급)</li> </ul>
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셋째이상 150만원의 축하금과 양육비를 지급한다.10회 분할) 둘째는 3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다.</li> </ul>
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첫째, 둘째 가정에 120만원(연2회 분할)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셋째 이상은 450만원(연1회 3년 분할 지급)이 지급된다. 부모 주소가 진안 관내에서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출산한 가정(1년 이내 출산 부모는 제외)이 대상이다.</li> </ul>
장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해 장수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는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한다.</li> </ul>
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생일 기준으로 부나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해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2회 분할), 셋째 200만원(2회 분할), 넷째 이상 300만원(2회 분할)이 각각 지급된다.</li> </ul>

시, 군	출산장려제도
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축하금과 양육비, 주택구입 및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출산축하금은 첫째와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300만원(3회 분할)이 지원된다. 양육비는 월 5만원씩 분할 지급된다. (첫째, 둘째 60만원, 셋째 180만원, 넷째 210만원, 다섯째 240만원, 여섯째 400만원, 일곱째 이상 500만원) 출산축하금과 양육비는 부모 모두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 대상이다. 또 여섯 번째 아이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3,000만원을 지원한다.</li> </ul>
고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생일 기준 부모가 고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둘째 이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고창군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 용품 및 출산선물을 제공한다.</li> </ul>
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및 셋째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출산장려금은 둘째 100만원(2회 분할), 셋째 300만원(3회 분할), 넷째 이상 400만원(3회 분할) 지급되며, 셋째는 건강보험료가 지원(월 2만원씩 5년간 분할 지급)된다.</li> </ul>
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원한다. 출산장려금의 경우 첫째는 5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360만원, 넷째 480만원, 다섯째 이상 600만원이 지급된다. (셋째부터는 연120만원씩 분할 지급) 대상은 출생 및 입양일로부터 신청일 현재 6개월 동안 계속해 부모 모두 무주군내에 주민등록 및 거주해야 한다.</li> <li>양육비는 신청일 현재 6개월 동안 계속 부모가 모두 주민등록 거주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li> </ul>

## 6. 타 시·도 출산장려제도

시·군	출산장려제도
서울 성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li> <li>출산장려금은 둘째 아이 2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아이 이상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아 별로 지원한다.</li> </ul>
부산 영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생아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 지원금 또는 출산 축하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생아의 부모가 그 신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li> </ul>
인천 옹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군에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li> <li>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부터 1,000만원을 지원한다.</li> <li>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년 단위로 지급하되, 1인당 20만원 범위에서 50세까지 보장한다.</li> </ul>

시·군	출산장려제도
관주 광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li> <li>출산장려금은 셋째 자녀 20만원, 넷째 자녀 1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은 300만원을 지원한다.</li> <li>산모가 신청일 현재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쌍생아 이상(다태아),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 해당) 산모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출산가정 돌보미’를 지원한다.</li> </ul>
울산 울주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li> <li>출산장려금은 첫째 영아인 경우 1회 10만원, 둘째 영아인 경우 12개월간 매월 10만원, 셋째 영아인 경우 12개월간 매월 20만원을 지원한다.</li> </ul>
세종특별자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은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부모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li> <li>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 출산 축하금 30만원, 둘째 자녀 양육비 120만원, 셋째 자녀 또는 5세 이하 입양아, 자녀 양육비 240만원을 지원한다.</li> </ul>
경기 성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로 한다.</li> <li>출산장려금은 둘째 자녀 30만원 이내, 셋째 자녀 100만원 이내, 넷째 자녀 200만원 이내, 다섯째 자녀 이상 3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li> </ul>
경기 파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li> <li>출산장려금은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한다.</li> </ul>
경기 여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아 또는 출생아의 부모를 말한다.</li> <li>출산장려금은 둘째 아이 50만원 지급, 셋째 아이는 200만원으로 하며 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넷째 아이는 500만원으로 하며 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다섯째 아이 이상은 700만원으로 하며 매년 140만원씩 5년간 지원한다.</li> </ul>
강원도 속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3월 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으로 한다.</li> <li>출산장려금은 둘째아는 매월 10만원을 1년간 지원하며, 셋째아 이상의 경우는 매월 1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li> <li>건강검진비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을 지원한다.</li> <li>출산준비금은 임신 10월 또는 조기 분만 시 1회에 한하여 10만원을 지원하며 쌍태아 또는 쌍생아일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지원한다.</li> </ul>

시·군	출산장려제도
강원도 양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양구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으로 한다.</li> <li>출산장려금은 셋째아 이상은 양육비 50만원 상당액을 넷째아 부터는 출생아 순위별로 30만원씩 추가 지원하며 넷째아는 80만원, 다섯째아는 110만원, 여섯째아는 140만원, 일곱째아는 170만원, 여덟째아는 300만원 상당액을 1회 지원한다.</li> <li>셋째아 이상 만3-6세 아동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li> <li>셋째아 이상 만 6세 이하 아동에게 진료비를 매월 6천원, 영양제를 매분기 1회(2만원 미만) 지원한다.</li> </ul>
강원도 양양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모로 한다.</li> <li>자녀수에 관계 없이 출산시 각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과 건강검진비 지급한다.</li> <li>첫째 아이 1회 10만원, 둘째 아이 1년간 월 10만원 및 5년간 월 3만원 이내의 안전보험료, 셋째 아이 3년간 월 10만원 및 5년간 월 3만원 이내의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li> </ul>
충북 영동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li> <li>출산장려금은 첫째아 30만원(1회지급), 둘째아 50만원(1회지급), 셋째아 500만원(10회 분할지급), 넷째아 1,000만원(10회 분할지급)을 지원한다.</li> </ul>
충남 천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월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li> <li>출생축하금은 셋째 자녀부터 100만원을 지원한다.</li> <li>양육지원금은 셋째 자녀부터 월 5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li> </ul>
충남 금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은 영아 출생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의 부모로 한다.</li> <li>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80만원 셋째 자녀 150만원을 지원한다.</li> </ul>
전남 여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li> <li>출산장려금은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300만원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700만원은 생일 달에 100만원씩 지급)지원한다.</li> <li>특별출산장려금 200만원을 지원.</li> </ul>
전남 완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의 부모로 한다.</li> <li>양육비 지원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1,000만원, 넷째아 이후는 직전의 형제 또는 자매의 양육비 지급액에 100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지원한다.</li> <li>※셋째아 이후는 지급 기준액에서 9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900만원을 익월부터 25만원씩 36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한다.</li> </ul>



시·군	출산장려제도
북 김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은 출생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li> <li>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10만원, 아가돌때 20만원,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매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 셋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매월 10만원씩 4년간 지원, 넷째 이상 자녀인 경우 출생시 매월 10만원씩 5년간 지원한다.</li> <li>출생아 건강보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만원 이하로 지원하며 5년간 지원한다.</li> <li>출산용품은 5만원 상당의 용품을 출생아 1명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li> </ul>
경북 울릉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3개월 전부터 울릉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로 한다.</li> <li>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20만원, 첫돌때 30만원 지원.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매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 셋째 자녀인 경우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li> </ul>
경남 진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은 출생날부터 계속하여 시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li> <li>출산장려금은 50만원을 일시불로 지원한다.</li> <li>출산용품은 10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원한다.</li> <li>입학축하금은 10만원 지원한다.</li> <li>출생아 건강관리비는 매월 3만원으로 5년간 지원한다.</li> <li>난임부부 기초검진비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차례만 지원한다.</li> <li>난임부부 격려금은 20만원을 한차례만 지원한다.</li> </ul>
경남 산청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은 출생일 현재 3개월 이상 군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로 한다.</li> <li>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는 신청시 50만원과 첫돌시 50만원, 둘째 자녀는 신청시 100만원과 첫돌, 두돌시 각각 50만원, 셋째 자녀는 신청시 100만원과 첫돌, 두돌시 각각 100만원을 지원한다.</li> <li>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는 매월 1명당 3만원 이하로 5년간 지원한다.</li> </ul>

## 7. 저출산 대책

### 1) 노동시장의 안정화

우리나라의 현재 혼인지연과 저출산 문제는 취업의 어려움, 직장의 불안정성 증대 등 경제적인 상황의 악화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출산력의 회복은 기혼 남녀의 취업 및 직업안정성의 회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해결 방법의 하나는 취업 및 직업 안정성 등 경제적 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것을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시켜 주는 것으로, 경제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 등 이와 관련된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 2) 영유아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의 사업들은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가정에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료를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가정의 보육비 부담 경감’과 ‘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혜대상자가 특정집단에 한정되어 있어 궁극적인 목표인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OECD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은 자격 조건을 제한하여 수혜를 받도록 되어 있어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정책의 자격조건 제한은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과의 경계성에 대한 논쟁을 발생시킬 수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차원이 아닌 출산율 문제 해결 차원에서 모든 가정이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출산지원 강화

출산장려정책의 출산지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출산과정에서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지원 수준을 단계별로 확대해야 한다. 산전검사 비용지원 및 임신부 지원에서 초음파 검사 등 임신기간 중 산전 진찰에 필요한 검사시 보건재정에서 30만 원을 지원하여 임신부에게 부담을 경감하였다. 하지만 지정병원이 한정되어 있고 초음파 등의 검사비용은 약 49만원으로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임신부가 2부담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30만원의 비용은 너무 적다. 따라서 금액 상향조정과 지정병원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불임의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등 불임부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불임시술 복원을 희망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및 일반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 예전에 비해 예산을 늘려 확대했지만 불임부부 의료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든 불임부부에게 정부에서는 적극 나서서 불임을 치료하여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불임의 치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 육아휴직제도 강화**

우리사회의 육아휴직제도는 현실과의 괴리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권고사직을 강요당한 예도 드물지 않다. 또한 여성이 근무하는 중소 및 영세기업에서는 거의 실시되지 않고 제도정책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산전후 휴가와 유사하게 현실과의 괴리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육아 휴직이 보편화 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5)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취업여성에게 육아부담은 사회참여를 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맞벌이 부부의 급증은 자녀 양육의 과도한 부담으로 세계 최저의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영유아를 둔 취업여성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직장 가까운 곳에 자녀를 마음 놓고 보낼 보육, 교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계속적으로 보육시설이 증가하고 보육서비스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보육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영유아 취원률을 확대해서 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6)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출산으로 인하여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효과를 증가하면 출산을 자제할 것이라는 논리에 따른다면 비용을 경감시키는 방법의 하나로써 사회보장제도

를 통한 비용의 사회적 분산을 활용할 수 있다. 저출산의 지속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미래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된다면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공동의 대처가 필요하다.

## 7)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

과거와 현재의 출산에 부정적인 현실을 감안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포함한 정부와 사회, 민간 기관의 지속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 자녀가 가정과 부모에게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안겨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출산에 관련한 많은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현실에서 젊은 층이 출산을 할 수 있는 효과적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하고, 문화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배경을 지원해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 8) 성평등 가치관의 확산

전반적으로 성이 평등한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며, 가정과 사회의 성평등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은 직접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여성의 출산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성평등과 양립지원 정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율 유지에도 성공적이었던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성평등 가치관을 고양하고 가부장적 가치관을 타파하여 가사노동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가족전체에 책임이 있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제도권과 사회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함께 남아선호사상을 불식시키고 가부장적 가치관을 조장하는 각종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제도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감시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 III. 결 론

지금까지 저출산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사례, 원인, 해결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일궈낸 우리나라는 그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출산에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정부에 의한 출산억제정책과 여성의 고학력화로 인한 가치관 변화, 양육비 부담 가중, 만혼, 독신 증가, 고용의 불안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처럼 저출산은 어느 일면의 문제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원인규명이 쉽지 않고,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출산장려 정책이 어느 시기에 어떠한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도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세계 최저의 저 출산 국가가 된 우리나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정책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일으키고, 인구의 노령화를 가져온다. 이는 결국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침체를 불러오게 됨으로 더 늦기 전에 대책을 강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이세희,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출산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9.
2. 최은영, 한국의 저출산 관련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책 여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3. 이지혜, 저출산 사회와 기혼여성의 가족가치관, 자녀가치관에 관한 연구, 울산대 대학원, 2011.
4. 이환정,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의 개선방안연구, 한성대 행정대학원, 2011.
5. 박우현, 출산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 정책대학원, 2011.
6. 염지혜, 저출산 고령화시대 노동력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7. 송정희, 정부 출산 장려정책과 저 출산의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8. 유광열,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 행정대학원, 2010.